

지방자치단체 주민정보화정책이 전자주민참여에 미친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o e-Citizen Participation of IT Policy for Citizen in Local Governments

김 선 엽 (경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Kim, Seon-Yeop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ducating about information to citizen in order to reduce digital divide.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IT policy for citizen, I analyzed empirically how to influe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First, if there are many more councils that related to information held, the attention of heads is increasing. In addition, as the level of interest of heads, it gives positive effect to information education performance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e-citizen. Second, information competency (percentage of information budget, percentage of information work force) 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nu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are direct impacts to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e-citizen. This shows that as the level of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budget and staffs are supported. As a result,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tion of e-citizen is increasing. Finally, close cooperation between policy actors and support will be needed in order to keep information education.

주제어 : 주민정보화, 전자주민참여, 구조방정식모형

Keywords: IT Policy for Citizen, e-Citizen Particip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I. 서 론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미 Galbraith는 1977년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불확실한 시장경제상황에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과 간섭은 시장이 지니는 여러 결점들을 시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효율 그리고 보다 증진된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Charles Wolf, Jr, 1993).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등 정보 관련 활동이 사회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정보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 2005). 이러한 IT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자본보다는 정보의 가치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됨으로써, 정보를 보유하는 사람이 미래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안문석, 1999). 빌 게이츠와 같이, 개인 또는 조직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부(副)가 결정되는 사회이기에 향후 정보획득을 위한 많이 비용을 투자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통신기기 소유측면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학력이나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상대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¹⁾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홍·한상진, 2000:29-55; 김생수, 2003: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시행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입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및 지역정보화추진전담조직 구성, 지역정보센터 운영 등을 지방의 역량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생수, 2003:13).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별도로 정보화예산을 책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정보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요인이 작용하는가? 또한 행위자로서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주민정보화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행위자로서 자치단체장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결정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상에서 주민정보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1)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OECD는 정보격차의 이해 2001(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계층의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간에 나타는 정보통신기술(ICTs)에 대한 접근기회의 차이 및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층별, 성별, 소득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삼성경제연구소·중앙일보사, 2000)으로 보며, 한국전산원(2000)은 "디지털 혹은 온라인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성별, 지역간, 계층간 정보접근 능력의 차이"로 본다(김생수, 2003: 7).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예산, 인력, 제도, 교육훈련 등의 경로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정보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모형

1.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현황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윤식(2009)은 지역정보화를 중앙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²⁾, 정충식(2002)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제시하면서 지역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제16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정보화란 “지방정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행정관청의 관할구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 정책은 주로 웹사이트 구축이나 전자정부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을 통하여 지역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형성함으로써 지방화는 물론 세계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안문석, 1999).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정책은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지역정보화정책은 주로 중앙부처의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추진되어 왔으며,³⁾ 1997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 협조 하에 행정전산화 분야를 집중 개발 운영해오고 있다.⁴⁾ 이를 통하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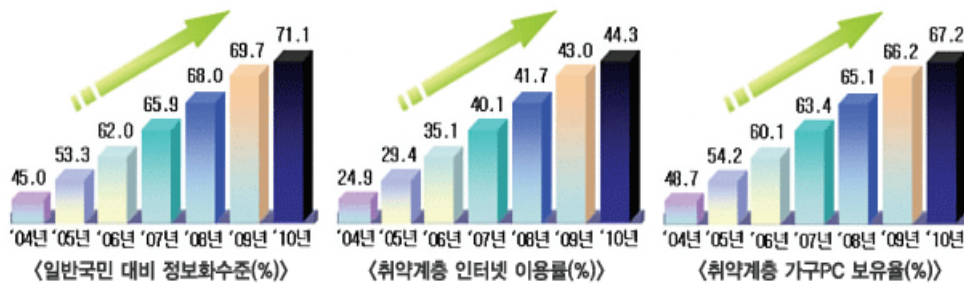
2) 이윤식(2009)은 지역정보화(regional information)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측면에서 지역 및 지방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외국 간의 격차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기통신시스템 및 정보기반시설을 구축·이용케 하는 정책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3)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 정책을 살펴보면, 1992년 '지역공공DB구축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구)정통부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와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였고,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94년부터 '지역정보센터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7년 이후부터 “000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시행되고, 1999년에는 CIO 제도가 도입되었다.

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PC 및 E-mail ID 보급, 중소기업에 대한 웹호스팅 지원 사업, 쇼핑몰 운영, 산업입지정보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정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추진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에 비해 지방은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에서 정보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이해도도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정책은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가 낮고 충분한 재원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0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그림 1> 우리나라 정보격차 현황

2. 지역정보화와 주민참여

일반적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은 자치단체 내부측면에서는 행정업무중심의 업무정보화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내부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외부측면에서는 업무처리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의 정보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원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지역정보화의 유형

대상	자치단체 내부	자치단체 외부
정보화 내용	· 내부업무 전산화 · 업무처리 효율성	· 민원서비스 정보화 · 민원인 만족
정보화 효과	· 정책지원 정보화 · 정책결정 합리성	· 열린정부 정보화 · 행정의 투명성

*출처: 김건위(2006: 88).

이렇듯, 지역정보화 추진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행정 정보화로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 등이 지역정보화의 구체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하영수, 2008: 1306 재인용).

최근에는 지역정보화의 패러다임이 e-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정부,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정보화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전자주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는 지리적 요소의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가상공동체는 네티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발적인 토론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의 연대와 유대감을 통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신유호 외, 2007: 240).

전자주민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적인 참여방식이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통해 투표율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인력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표와 같은 무효표를 축소로 투표관리업무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해외 거주자 투표문제 해결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나 e-mail을 이용한 쌍방향 대화형태의 주민참여이다(이시원·민병익, 2002: 208). 이 방식은 매우 보편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치단체 소식과 각종 이벤트를 공지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상에서 정책토론의 장으로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SNS서비스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정책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여론 수렴을 떠나서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나아가서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지역정보화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최고관리자의 지지, 예산, 인력, 교육훈련 등이 정보화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서진완(2000)의 경우, 인구통계적 요인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정보화 정책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이윤식·오철호(2000), 엄석진·김병섭(2005), 성도경·장철영(2006)은 정보화정책이 기관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지만, 기관외부의 측면인 대민서비스와 전자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김생수(2003)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주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고양,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센터 관리 전문인력의 활용, 읍·면장의 정보화 의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정욱(2007)도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패 요인으로 교육훈련, 예산의 효율성, 실시간 정보공유, 간부급의 마인드, 정보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주민정보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현승현 외(2007)과 하영수(2008)가 있었다. 우선 현승현 외(2007)는 지역정보화 정책이 전자주민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로분석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정책 내에 여러 가지 정책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관내부 요인만 접근하여 전자주민참여를 규명함으로써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하영수(2008)은 특정자치단체의 주민정보화 정책에 대한 주민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민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정보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처 간의 협력, 보안문제, 정보공유문제, 전문인력문제 등으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지와 주민정보화 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산 등의 상호관계와 주민참여에 관하여 증명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표-2> 선행연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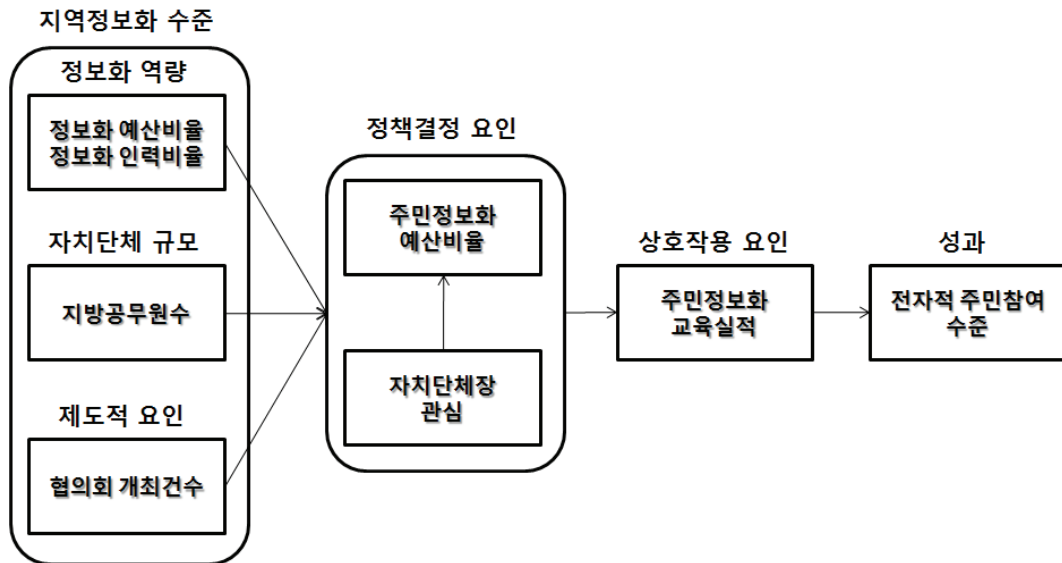
연구자	주요변수		연구방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진완(2000)	문제인식능력, 정보탐색능력, 정보평가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수집능력		설문조사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층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가정주부와 불투명력 계층에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윤식·오철호(2000)	조직 크기, 조직순응도, 조직 정보화	조직 생산성	분산분석(ANOVA)	행정정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 및 이용, 정보화 인력, 정보화 투자, 조직의 순응도(공무원이 정보화에 순응하는 정도), 조직의 크기로 나타남
김생수(2003)	시설이용 환경, 시설관리 및 운영, 서비스제공 및 이용		설문조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주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고양,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센터 관리 전문인력의 활용, 읍·면장의 정보화 의지 강화 등 지적
엄석진·김병섭(2005)	정보화수준, 인구, 면적, 결산액, 산하기관수, 민원서류처리건수	총 정원수, 중간관리증비율	회귀분석	행정 정보화는 기초자치단체의 인력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방향은 양(+)의 방향을 나타냄.
성도경·장철영(2006)	최고관리자지지, 조직분위기, 정보화교육, 사용능력, 수용자세	정보기술 사용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사용자의 정보기술 사용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자의 정보 수용자세, 최고관리자의 지지, 정보화 교육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냄
문정욱(2007)	공공정보화 성공요인, 공공정보화 장애요인		설문조사	공공정보화의 성공요인으로는 교육훈련, 예산의 효율성, 실시간 정보공유, 간부급의 마인드, 정보보안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정보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정보의 누출, 예산관련 문제, 부처간 협력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 저해요인으로는 보안문제, 부처간 협력 미흡, 정보제공에 따른 고비용 순으로 나타남
현승현·신유호·이병기·김건위(2007)	정보화 투자, 정보화 인프라, 공무원 교육, 정보화 활용	전자주민참여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정보화 투자가 정보화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화인프라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활용은 전자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하영수(2008)	주민정보화, 주민생활정보화교육, 주민복지 정보화, 유비쿼터스 마을 조성, 지역안전관리, 일반적 특성	주민생활정보화 만족도	요인분석, 회귀분석	주민생활정보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민정보화, 주민생활정보화교육, 주민복지정보화, 유비쿼터스마을조성 등으로 나타남

*출처: 신유호 외(2007: 244) 일부 수정보완.

III. 연구 설계

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측정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정보화 정책과 전자주민참여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분석모형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보화 역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예산비율과 정보화인력비율로 하였으며, 자치단체 규모로는 지방공무원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보화정책 수립측면에서 협의회 개최건수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Boulding(1953)은 조직의 크기가 변화하면 조직의 중요한 구조적·절차적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이윤식·오철호, 2000:168). 이렇게 조직의 크기가 구조적·절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 하나의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행위자로서 자치단체장을 선정했으며, 이러한 주민정보화 정책에 대한 지표로서 주민정보화예산비율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예산은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정치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이문영·윤성식, 2003). 즉,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바로 정책결정과 연결되며, 이러한 정책을 집행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정보화 정책의 상호작용으로서 주민정보화교육실적을 선정하였다. 이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하는 장(場)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정보화 정책의 성과로서 전자적 주민참여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전자적 주민참여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평가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등을 측정한 지표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지 파악할 수 있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항목	측정지표	산식
정보화 역량 ¹⁾	정보화예산비율	(정보화예산/일반회계 총예산×100) 의 3개년간 이동평균점
	정보화인력비율	정보화인력수/소속 공무원수×100
자치단체 규모	지방공무원수	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수
제도적 요인	협의회 개최건수	정보화관련 협의회 개최건수
행위자	자치단체장의 관심	설문조사의 평균값
주민정보화 정책	주민정보화예산비율	(주민정보화예산/일반회계 총예산×100) 의 3개년간 이동평균점
상호작용	주민정보화교육실적	(참여주민수×교육당 교육시간)/총주민수
성과	전자주민참여수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측정지표값

주1): 정보화 역량은 정보화예산비율과 정보화인력비율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요인 점수화 값으로 했음 .

출처: 자치정보화조합(2005). 「2005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측정」 보고서 .

2. 가설설정

이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정보화역량(정보화예산비율, 정보화인력비율)과 자치단체규모(지방공무원수), 제도적요인(협의회개최건수) 등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동기요인(자치단체장의 관심, 주민정보화예산비율)과 상호작용요인(주민정보화교육실적) 그리고 성과(전자주민참여수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을 하였다.

주민정보화정책의 주민참여에 대한 가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인 정보화역량과 자치단체 규모, 제도적요인 등이 내부적 동기요인과 상호작용, 성과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이 되고, 실질적인 협의회개최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관심유발과 주민정보화예산확대로 이뤄지며, 이는 주민정보화교육이 증가로 이뤄져 결국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적 동기요인(자치단체장의 관심, 주민정보화예산)이 상호작용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을 경우엔, 주민정보화예산을 증가시키고,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이것이 결국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인 주민정보화교육이 직접적으로 성과인 전자주민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주민정보화교육이 진행될수록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앞으로 전자주민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부가설설정은 <표 4>와 같다.

<표 4> 가설설정

구분		세 부 가 설
협의회개최건수	<-- 정보화 역량	정보화 역량이 많을수록 협의회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의회개최건수	<-- 공무원수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협의회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관심	<-- 정보화 역량	정보화 역량이 많을수록 주민정보화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자치단체장의관심	<-- 공무원수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주민정보화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은 높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의관심	<-- 협의회개최건수	협의회개최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장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주민정보화예산비율	<-- 정보화 역량	정보화 역량이 많을수록 주민정보화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주민정보화예산비율	<-- 공무원수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주민정보화예산이 많을 것이다.
주민정보화예산비율	<-- 협의회개최건수	협의회개최가 많을수록 주민정보화예산이 많을 것이다.
주민정보화예산비율	<-- 자치단체장의관심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많을수록 주민정보화예산이 많을 것이다.
주민정보화교육실적	<-- 주민정보화예산비율	주민정보화예산이 많을수록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민정보화교육실적	<-- 자치단체장의관심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을수록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민정보화교육실적	<-- 협의회개최건수	협의회개최가 많을수록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민정보화교육실적	<-- 공무원수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민정보화교육실적	<-- 정보화 역량	정보화 역량이 많을수록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자치단체장의관심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주민정보화예산비율	주민정보화예산이 많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정보화 역량	정보화 역량이 많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공무원수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협의회개최건수	협의회개최가 많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전자주민참여수준	<-- 주민정보화교육실적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이 좋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이 높을 것이다.

3.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은 (구)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에서 조사된 정보화수준측정 데이터(2005)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이라고 한다. 즉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인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없는 잠재요인을 발견하고 회귀분석으로 잠재요인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김계수, 2004:398-399). 이러한 분석기법을 토대로 경로도 작성, 모형의 적합도 평가하고, 모형수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IV. 실증분석결과

1. 정보화관련 지방자치단체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정책에 예산, 인력, 협의회개최 그리고 교육실적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2005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보고서(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 2005)에 의하면, 234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정보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정보화예산비율은 2001년 시, 구, 군, 2002년 구, 시, 군, 2003년은 시, 구, 군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군지역의 정보화예산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4년에는 구지역 1.18%, 군지역 1.16%, 시지역 1.14%로 행정계층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보화예산비율(단위 : %)

구 분	정보화예산비율				신규투자 예산비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행정 계층별	시	1.42	0.97	1.34	1.14	44.5	52.2
	군	1.02	0.92	0.97	1.16	38.3	38.9
	구	1.32	1.20	1.24	1.18	34.6	46.1

출처: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시군구별 정보화인력비율은 시-구-군 순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예년과 비슷하게 지속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정보화 인력의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위반추정치와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overall fit)를 검토하는 것이다. 위반추정치(offending estimate)란 구조모형이나 측정모형에서 수용한계를 벗어난 추정계수를 말한다. 위반추정치의 일반적인 예는 표준화계수가 1.0에 가깝거나 1.0을 초과하거나, 추정계수에 대해 매우 큰 표준오차가 보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반추정치가 발견되면 모형을 평가하기 전에 해결하고 다시 추정해야 한다. 검증으로서는 카이제곱(χ^2)검정이 일반적이며, 적합도로는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그리고 비표준적합지수(turker-lewis index: TLI)등이 많이 사용된다. 이들 적합지수들로 모형을 평가할 경우 단일의 지표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석우·최용석, 2001).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6> 정보화인력비율(단위 : %)

구분		정보화인력비율			
		2001	2002	2003	2004
행정 계층별	시	1.85	1.87	1.57	1.58
	군	1.69	1.71	1.34	1.37
	구	1.57	1.55	1.49	1.56

출처: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행정계층별로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건수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역시 전년도 대비하여 시군구 공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협의회 경우 2003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위원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낮은 개최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시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정보화관련협의회개최(단위 : 건, 천원)

구분		정보화촉진협의회개최건수				기타협의회 개최건수			위원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년
행정 계층별	시	2.18	1.32	1.01	0.91	0.58	4.02	0.01	1.56
	군	1.33	0.74	0.64	0.39	0.66	0.73	0.60	0.01
	구	0.8	0.46	0.50	0.49	0.23	0.31	0.16	0.01

출처: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은 시의 경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나, 군지역과 구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시지역이 가장 높고 구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2003년까지는 정보화 인프라가 미흡하고 주민 정보화 마인드가 약한 농촌 밀집지역인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4년 실적에서는 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인다.

<표 8> 주민정보화교육(단위 : 시간)

구 분		주민정보화교육실적		
		2002년	2003년	2003년
행정 계층별	시	0.581	0.721	1.197
	군	0.897	0.999	0.764
	구	0.256	0.403	0.265

출처: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전자주민참여 및 서비스 수준은 전년도의 홈페이지 활용수준과 전자주민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조사한 결과로 (구)행정자치부 2004 홈페이지 평가자료 중 관련성이 깊은 지표값만을 선정·활용하였다. 시의 경우 전자적 주민참여 및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자치구의 경우 66.87점으로 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9> 전자주민참여 및 서비스(단위 : 점)

구 분		전자주민참여 및 서비스 수준
		2004년
행정 계층별	시	68.25
	군	64.35
	구	66.87

출처: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전반적으로 정보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점차 감소하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정보화정책에서는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가 0.85보다 적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0.8을 초과하는 상관계수가 없으므로 잠재요인변수들 사이에 상호독립적인 관계임을 판단할 수 있다.

<표 10>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h
정보화 예산비율 (a)	1							
정보화 인력비율 (b)	.418(**)	1						
공무원수 (c)	.163(*)	-.051	1					
협의회 개최건수 (d)	.287(**)	.272(**)	.403(**)	1				
주민정보화 예산비율 (e)	.312(**)	-.041	.159(*)	.039	1			
자치단체장의 관심 (f)	.159(*)	.145(*)	.019	.197(**)	.084	1		
주민정보화 교육실적 (g)	.178(**)	.211(**)	.162(*)	.309(**)	.090	.027	1	
전자주민참여 수준 (h)	.206(**)	.098	.179(**)	.156(*)	.087	.078	.154(*)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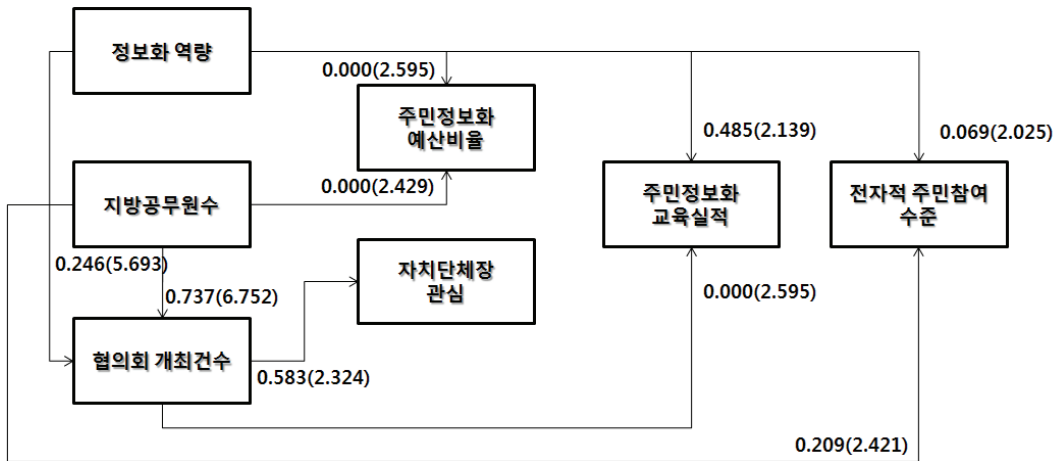
1) 분석결과

AMOS 4.0 프로그램을 적용한 분석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구성된 가설적 모형이 실제 자료와 어느정도 부합되는지를 나타내는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모형적합도 지수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적합지수(GFI)는 0.9이상이어야 좋은 모형이고, 조정적합지수(AGFI)는 기초적합지수(GFI)를 확장시킨 것으로서 0.8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근사평균오차제공근(RMSEA)은 사례수가 클 경우 설정된 모형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는 χ^2 검정의 특성을 교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0.05에서 적합도를 정하여 분석한다. 특히 표준적합지수(NFI)가 0.9라는 의미는 기초모형에 비해 제안모형이 90%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보고, 비표준적합지수(TLI)는 0.9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분석모형은 <표 11>와 같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모형 적합도 평가

적합지수	모형의 적합 지수	모형적합판단기준	적합여부
x^2	1.305	-	
p-Value	0.309	$p > 0.05$	○
x^2/df	1.305	3이하	○
GFI	0.999	0.90이상	○
AGFI	0.965	0.80이상	○
TLI	0.994	0.90이상	○
PNFI	0.047	0.60이하	○
NFI	0.993	0.90이상	○
CFI	1.000	0.90이상	○
RMSEA	0.012	0.08이하	○

이러한 모형적합도를 바탕으로 주민정보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수가 협의회개최와 주민정보화예산 그리고 전자적 주민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회개최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주민정보화교육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정보화교육실적이 바로 전자주민참여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림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2) 가설검정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수가 협의회 개최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산과 인력이 풍부하고, 자치단체규모가 클수록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협의회 개최건수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정보화예산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정보화 예산과 인력, 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주민정보화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은 협의회개최건수와 정보화 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통하여 결의된 사항이 직접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정보화교육 실적이 바로 전자주민참여수준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전자주민참여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 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외적요인인 자치단체의 규모가 큰 지역과 정보화예산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전자주민참여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즉, 주민정보화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상호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전자주민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는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민정보화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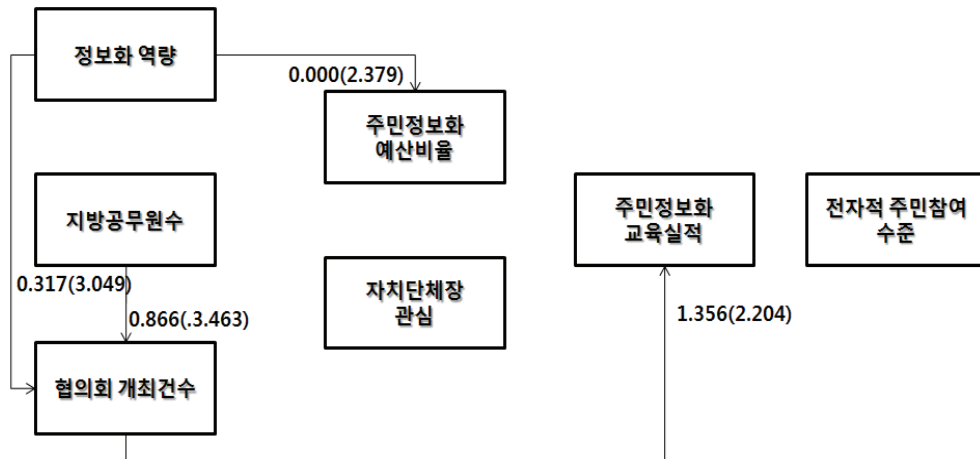
<표 12> 가설검정 결과

가 설	전체	시	군	자치구
협의회개최건수 <-- 정보화 역량	0.246(5.693)**	0.317(3.049)**	0.207(3.637)**	0.115(2.168)*
협의회개최건수 <-- 공무원수	0.737(6.752)**	0.866(3.463)**	0.674(1.954)	0.666(4.370)**
자치단체장의관심 <-- 정보화 역량	0.324(1.829)	0.452(1.401)	0.327(1.146)	0.447(1.768)
자치단체장의관심 <-- 공무원수	-0.261(-0.570)	-0.050(-0.064)	-0.682(-0.414)	1.215(1.526)
자치단체장의관심 <-- 협의회개최건수	0.583(2.324)*	-0.140(-0.416)	2.094(4.182)**	0.933(1.666)
주민정보화 예산 비율 <-- 정보화 역량	0.000(2.595)**	0.000(2.379)*	0.000(0.455)	0.000(4.309)**
주민정보화 예산 비율 <-- 공무원수	0.000(2.429)*	0.000(-1.181)	0.000(0.601)	0.001(5.836)**
주민정보화 예산 비율 <-- 협의회개최건수	0.000(-1.328)	0.000(0.343)	0.000(-0.750)	0.000(-3.001)**
주민정보화 예산 비율 <-- 자치단체장의관심	0.000(1.014)	0.000(-1.647)	0.000(0.703)	0.000(2.418)*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 주민정보화예산비율	515.929(0.947)	766.107(0.400)	544.437(0.925)	355.071(1.517)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 자치단체장의관심	-0.074(-0.895)	-0.057(-0.267)	-0.139(-1.478)	0.089(2.137)*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 협의회개최건수	1.172(3.662)**	1.356(2.204)*	0.897(1.860)	-0.089(-0.442)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 공무원수	0.118 (0.202)	1.411(0.970)	-1.008(-0.697)	0.548(1.677)
주민정보화교육 실적 <-- 정보화 역량	0.485 (2.139)*	0.620(1.002)	0.455(1.807)	0.437(4.544)**
전자주민참여수준 <-- 자치단체장의관심	0.008 (0.638)	-0.009(-0.423)	-0.007(-0.348)	0.077(2.951)**
전자주민참여수준 <-- 주민정보화예산비율	35.961 (0.444)	164.393(0.819)	-167.891(-1.409)	203.992(1.407)
전자주민참여수준 <-- 정보화 역량	0.069 (2.025)*	0.099(1.518)	0.084(1.623)	0.037(0.554)
전자주민참여수준 <-- 공무원수	0.209 (2.421)*	0.276(1.799)	0.398(1.362)	0.011(0.054)
전자주민참여수준 <-- 협의회개최건수	0.003 (0.061)	-0.019(-0.281)	-0.078(-0.790)	0.229(1.874)
전자주민참여수준 <-- 주민정보화교육실적	0.014 (1.414)	0.011(0.924)	0.023(1.084)	-0.093(-1.253)
n	234	77	88	69

다음으로, 자치단체 유형으로 나뉘어서 분석하였다. 시의 경우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수가 정보화관련 협의회개최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화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고, 자치단체 규모가 큰 경우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역량이 주민정보화예산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화예산의 세부항목으로 주민정보화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보화관련 협의회개최건수가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이 주민정보화교육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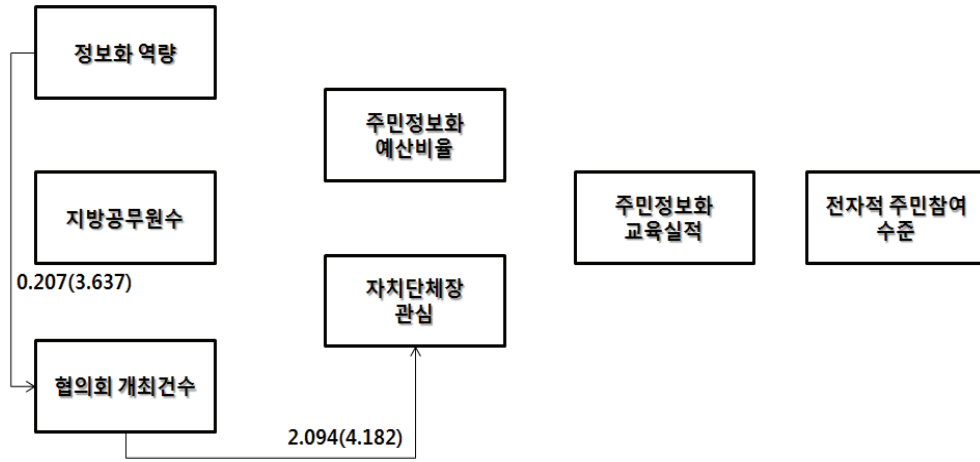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정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전자주민참여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시의 정보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나 주민정보화정책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4> 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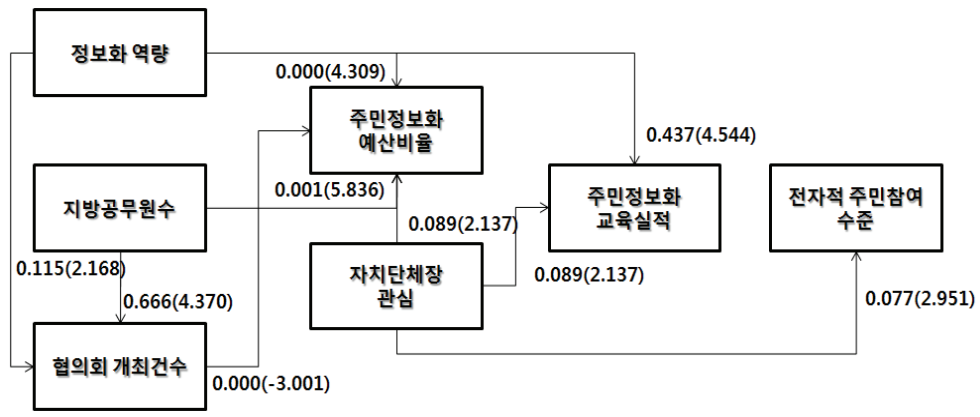
군의 경우, 정보화 역량이 정보화관련 협의회 개최 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자주 개최할수록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높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요인에 대해선 유의미한 값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련의 정책과정이 전자주민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군 지역이 도시화율이 낮고, 행정구역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주민의 정보화관련 교육실시가 큰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군 분석결과

자치구의 경우, 시와 군에 비해 매우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정보화 역량과 공무원수의 경우 협의회개최건수와 주민정보화예산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자주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민정보화예산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치구의 경우 자주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행정비용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향후 적절한 수준에서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 실적이 정보화 역량과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을수록 전자주민참여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주민정보화정책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치구의 경우 시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정책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자치구 분석결과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민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관련 협의회를 자주 개최할수록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을수록 주민정보화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자적 주민참여수준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주민참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면, 정보화 역량(정보화예산·인력비율), 자치단체규모(지방공무원수) 등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역정보화 정책에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전자주민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군구의 경우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주민정보화예산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와 군의 경우 직접적인 전자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전자주민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내부 협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을 할 때, 주민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정보화관련 협의회개최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와 전자주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주민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역량과 자치단체규모에 따라서 전자주민참여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함께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각 요인들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정보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요인들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실패 또는 예산이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치정보화조합의 2005년도 정보화측정지표의 횡단면 자료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시 예산배정과 정보화교육을 자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정지표 값으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결정과정상의 발생된 문제 또는 합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질적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계량분석만 가지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29호).
- 김건위. (2006). 「DEA를 통한 지방행정 정보화」.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 김생수. (2003). 소도읍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 방안. 「한국행정연구」, 12(4): 3-32.
- 김석우·최용석. (2001). 「인과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학지사.
- 문정욱. (2007). 공공부문 정보화의 주요 성패요인과 정보공유 저해 요인: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19(6): 1-17.
- 서진완. (2000).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측정. 「한국행정학보」, 34(1): 309-325.
- 성도경·장철영. (2006). 공무원의 정보기술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8(3): 61-83.
- 안문석. (1999). 「정보체계론(4판)」. 서울: 학현사.
- 엄석진·김병섭. (2005). 행정 정보화가 행정 조직 내 인력 규모 및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4(3): 155-184.
- 이문영·윤성식. (2003). 「공공채무관리」. 서울: 법문사.
- 이시원·민병익. (2002).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205-229.
- 이윤식. (2009). 「신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윤식·오철호. (200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163-189.
- 정충식. (200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전략연구. 「지역사회연구」, 10(1): 1-30.
- 하영수. (2008). 주민생활정보화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영덕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4): 1303-1324.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1). 「2010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 (2005). 「2005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연구보고서, 서울: 자치정보화조합.
- 현승현·신유호·이병기·김건위. (2007). 지방행정정보화가 전자주민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21(3): 233-267.

Charles Wolf, Jr(1993),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Second Edition*. U.S.A: The MIT Press.

Kenneth J. Arrow(1996), 「신조직 이론: 조직의 한계」, 이하형(역), 서울: 선학사; *The Limits of Organization*. U.S.A: W. W. Norton & Company. 1974

Paul A. Sabatier. (2007),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U.S.A: Westview Press

접수일(2011년 9월 10일)

수정일자(2011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4일)